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역할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서울대학교

지난 5월 29일, 드디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다. 지난해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언급한 후 6개월만이다. 2050 탄소중립 위원회는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최 바로 전날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 다자간 환경회의인 P4G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지난 4월 22일의 세계기후정상회의까지 총 131개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그 중 하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전환이 필요하기에,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는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되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다지면서 전환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거버넌스기구로, 1기 탄중위는 당연직인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기후, 에너지, 경제, 산업,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사회, 청년, 산업, 노동 등 사회 각계 대표 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하면 현재 9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분과위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안전 관련 자문을 얻기 위해 분과위원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국민·지역·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산업·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하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 학습과 숙의,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당면과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앞으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나침반'으로, 부문별 감축량과 이행수단, 지원대책 등이 담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하였듯이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는 2030 감축 목표를 COP26 때까지 확정하는 것 또한 중차대한 당면과제다. 두 과제 모두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기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해야 하기에 탄중위는 위원회 내부 토론과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두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